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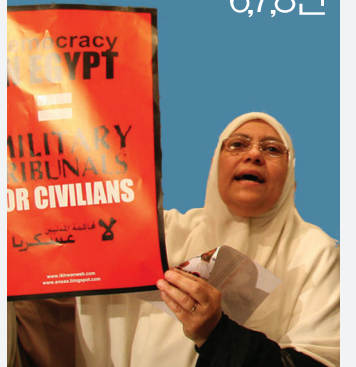
한미FTA가 낳을 부유층의 '국익'은 다수 대중에겐 재앙이다



한미FTA와
반신자유주의 운동
3,45면

제5차 카이로
국제 반전 회의보고 II
- 헤즈볼라 정치국원
리마 파크리 인터뷰
- 이란인 사회주의자
엘라헤 로스타미 포베이
인터뷰
- 리스펙트 사무총장
존 리즈 인터뷰

6,78면



국민연금 개악을 저지하라
12면

진보진영 선거연합과
진보의 기준
11면

다가오는
지구온난화의 재앙
9면

www.counterfire.or.kr

〈맞불〉온라인 기사

카이로 국제 반전 회의에서
진행된 다양한 컨퍼런스와 포럼의
생생한 현장과 목소리를 담은
취재기

교장공모제는
민주 개혁이 아니다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증제의 폐해를
극복할 대안이 아니라 독단적이고
신자유주의적 학교 운영을 낳을
것이다

금융노조의 영업시간 단축
요구는 정당하다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인용해도 될까요?”

〈중앙일보〉 주필 문창극: “대통령이 이런 결심[한미FTA 협상 타결]을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나라가 북 있는 나라라는 증거”
 김용갑: “협정 타결 소식의 감동은 20년 전에 대통령 직선제를 얻어냈던 6·29 선언의 감동과 같았다.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을 높게 평가한다.”
 조갑제: “노 대통령과 같은 저항과 도전 정신의 소유자는 기득권자와 싸울 때 사명감이 생겨서 용감해지고 때로는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한다.”

— 한미FTA 타결한
 노무현을 찬양하는 우익들

“그동안 노 대통령이 좌파다, 분배주의자다, 경제성장에 관심이 없다는 식으로 비난을 받으면서 노 대통령을 잘 몰랐던 분들이 ‘그렇지 않았구나. 내가 노 대통령을 제대로 봤구나’ 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
 — 노무현의 지지율 상승에 고무된
 전 청와대 홍보수석 조기숙

“이번 《이명박 리포트》는 경험을 바탕으로 이 전 시장의 비인간성과 비도덕성을 집중 조명한 것 … 이 책자를 통해 이 전 시장이 이런 사람이었는가 경악을 금치 못할 것”
 — 《이명박 리포트》
 출판기념회에서 김유찬

“우리 자식들이 이 땅에서 밥먹고 살려면 이 좌파들 몰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못 산다.”
 —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강동순

경총 회장 이수영: “비정규직은 대부분 게으르고 노력을 덜해 결국 낙오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적인 노력을 배가하도록 사회적으로 채찍이 필요하다.”
 한국노총 위원장 이용득: “노사 간에 같이 일할 거리를 찾은 것이 ‘노사발전재단’이다. 여기에서 할 일이 많아서라도 길거리 투쟁을 할 시간이 없을 것이다.”
 — 〈한국경제신문〉 주최
 노·사·정 간담회에서

공무원 퇴출제 확대를 저지해야 한다

지난 4월 4일 서울시는 3퍼센트 강제 퇴출 후보자 1백2명을 발표했다. 서울시와 정부는 언론보도를 통해 퇴출 후보자들이 파렴치한 부패·비리·성희롱 공무원인 양 매도했다.

물론 그런 사람도 극소수 포함돼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퇴출 후보자 1백2명 중 93명은 비리를 저지를 만한 재량권이 전혀 없는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구조조정 분위기 조성을 위한 억울한 속죄양들이었고 퇴직을 두달 앞둔 노동자와 여성, 장애인까지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지금 엄청난 인간적 수모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기능직·기술직·수도직 하위 공무원들이 7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능·기술직 중심의 구조조정(사유화)의 신호탄과 같다. 물 사유화 등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사유화를 위한 수순인 것이다.

결국 1년에 2회 실시하겠다는 3퍼센트 퇴출제는 하위직 공무원의 상시 구조조정과 노동조건 악화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퇴출제보다 더 무서운 것도 할 수 있다”던 행자부 장관 박명재는 4월 10일 중앙정부에서 더 강도 높은 퇴출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자체에서 시작해 중앙정부로 이어진 구조조정 바람이 사기업까지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한편,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사무실 폐쇄에 항의한 전공노소 소속 연기군지부 지부장·사무국장·조직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고, 2004년 특별법을 거부하고 파업에 참가한 구로구지부 지부장·사무국장도 각각 해임과 파면이 확정됐다.

그래서 이창화 대경본부장은 4월 3일 ‘퇴출제’ 반대 촛불집회에서 “불법단체라고 탄압하고,

연금 개악과 함께 이제는 강제로 쫓아내려 한다”며 분노를 터뜨렸다.

신호탄

행자부장관 박명재는 “공무원노조는 가만히 있어도 법 내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며 비웃기까지 했다.

결국 정부는 (파업권 배제와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특별법을 수용하면 대화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쪽에선 ‘퇴출제’ 등 구조조정 계획을 강행하려 한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법 수용파는 ‘(가칭)전국공무원노조 정상화와 대통합 추진위’(이하 통추위)를 임의로 구성해서 4월 9일 서울본부와 부산본부를 중심으로 특별법 수용을 전제로 한 조합원 총투표를 강행했다.

특별법 수용파는 ‘퇴출제’ 등 구조조정에 맞서 투쟁을 조직하기보다 지난해 11월 대의원대회 결정 사항인 “총투표 반대, 특별법 거부 노동3권 쟁취”를 뒤집는 데만 몰두하며 공무원노조를 분열시키고 있다.

지난 4월 5일 강제 퇴출 후보자들을 실은 버스가 ‘교육’ 장소로 떠나는 것을 막고 있는 공무원 노동자들

한편, 공무원노조 권승복 지도부도 정부와 맞선 투쟁 건설에 머뭇거리며 중재안(파업권을 배제한 특별법 수용 입장)을 내놓더니 급기야 특별법 수용파의 요구사항(4월 대의원대회 개최, 설립신고 지부 대의원 할당, 5월 총투표 등)을 모두 받아들이며 타협해 버렸다. 유감천만이다.

대경본부는 이에 반발해 “해고자 복직, 특별법 독소조항 개정이라는 선결 과제 해결 없는 총투표 결사 반대, 4월 대의원대회 개최 반대, 권승복 지도부 총사퇴, 통추위 간부 징계”를 요구하며 공무원노조 사무실 점거농성을 시작했다. 이에 ‘특별법 거부 노동3권 쟁취’를 요구하는 많은 활동가들이 공감하고 있다.

권승복 지도부는 특별법 수용파와 거부파 사이에서 좌충우돌을 거듭하더니 정작 퇴출제 등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 건설에서는 무기력하기만 했다. 이는 특별법 내 투항을 거부하고 구조조정에 맞서 단호하게 투쟁하려는 활동가들에게 혼란과 사기저하만을 가져왔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구조조정

저지와 노동3권 쟁취를 위해 단호한 투쟁을 건설할 지도부이다. 물론 권승복 지도부의 행태는 좌파 지도부라도 노조 상근 간부로서 협상에 연연하며 동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따라서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공무원 노동자들’로 결집해 온 좌파적 공무원 활동가들은 권승복 지도부를 대체하는 투쟁적 지도부 건설을 지지할 뿐 아니라, 투쟁 건설을 회피하는 지도부로부터 독립적인 현장 노동자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이미 구로지부 동지들은 그 가능성을 보여 줬다. 구로지부 지도부는 퇴출제에 맞선 투쟁을 회피했지만 구로지부 활동가들은 독립적인 행동 건설로 퇴출제를 저지했다.

4월 말로 예정된 대의원대회도 특별법 수용 조합원 총투표를 제안하는 자리가 아니라 ‘퇴출제’ 등 구조조정에 맞서 총력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구조조정에 효과적으로 맞서기 위해서도 노동3권 요구는 여전히 중요하다.

최영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중인 통신 ‘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개악안은 유무선 통신사업자와 인터넷 사업자가 모든 통화·통신기록과 인터넷 로그인 기록을 1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한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통화했고 어느 사이트에 몇 차례 로그인해 어떤 파일을 내려받았는지 등 지극히 사적인 일이 무려 1년이나 기록으로 남는 것이다. 이는 전 국민에 대한 ‘통신 감시’이자 ‘비밀 강탈’이다.

게다가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감청까지 합법화한다. 지난해 전체 통신 감청 건수

가 전년 대비 18.3퍼센트 늘고 이 중 인터넷 및 PC통신 감청은 무려 48.8퍼센트나 증가(2007년 3월 정보통신부 발표)했는 데도 말이다.

불법

통비법 개악안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휴대전화·이메일·메신저 감청 장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한나라당 주성영은 “수사기관이 직접 장비를 설치해 사용하는 불법 감청을 막기 위해”라고 설명

한다. 즉, ‘합법’적인 감청을 마구잡이로 하겠다는 것이다.

통비법 개악안은 국가보안법을 통한 마녀사냥, 한미FTA 반대 집회와 반전 집회 불허·방해 등 최근 이어진 민주주의 공격의 일부이기도 하다.

간첩

국정원은 지난해 말 “간첩들 … 을 잡아내기 위해 국내 인터넷 통신 모두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

다. 국정원의 지난해 하반기 감청 건수가 전년 대비 58.7퍼센트나 상승했는데도 국정원장 김만복은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등[은] … 감청이 불가능”하다고 투덜거리며 통비법 개악을 재촉해 왔다.

이는 말과 글을 통한 대중의 자유로운 주장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다.

개인의 사생활을 더 치밀하게 감시하는 동시에 정치적 자유도 제약할 통신 ‘비밀 보호’법 개악안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

송주

이제는 “체결 저지!”다

노무현은 “중국을 비롯한 세계시장의 변화까지 내다보는 큰 장사꾼의 안목을 가지고 [한미FTA] 협상에 임했다”고 말했다. “앞질러가기 위해서뿐 아니라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도전해야” 한다고도 했다.

우파 언론들도 이제 한미FTA에 따른 구조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한미FTA 협상 타결과 한국경제의 미래〉라는 보고서에서 한미FTA가 “기업 구조조정을 다시 촉진하는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며 “FTA를 산업 고도화의 계기로 활용하려는 자세”를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노조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며 구조조정을 위해 노조가 고분고분해지라고 요구했고, 〈조선일보〉는 “국내 기업들끼리 더 많은 피를 흘리고, 더 많은 사상자가 나올 수 있는 내부 경쟁 체제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보완 대책이어야 한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듯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 고도화”는 한국 지배자들의 핵심 과제다. 그래서 전 대통령 김대중도 “한미FTA에 올인해야 한다”며 노무현을 거둬고 있고, 조중동도 한미FTA에 대한 노무현의 ‘진의’를 의심했던 것을 사과하며 ‘위대한 결단’을 찬양하고 있다. 심지어 조갑제조차 노무현이 “저항과 도전 정신의 소유자”라며 칭찬했다.

지배자들의 전폭적인 지지 덕분에, 바닥을 기던 노무현의 지지율도 30퍼센트 정도로 올라갔다. 이것은 개혁 여망 대중을 배신하고 노골적으로 우파와 동맹을 맺은 효과이지만, 일시적인 효과일 뿐이다. 벌써부터 개헌 발의를 놓고 노무현과 우파의 동맹은 갈라지기 시작했다.

사실 이런 패턴은 노무현 집권 내내 지속됐다. 노무현은 사회 개혁과 진보를 바라는 대중의 기대를 배신하고 이라크 파병, 평택 미군기지 확장 이전, 노동법 개악 등을 강행해 왔고 이제 한미FTA까지 타결한 것이다.

0.1 퍼센트

그럴 때마다 한나라당과 조중동은 노무현을 확실히 지지했고, 노무현의 우파적 행동의 결과 우파가 강화됐다. 이명박은 벌써부터 “이번 정권은 FTA에 서명하는 것으로 의무를 다하고 … 다음 정권인 우리 한나라당이 맡아서 [한미FTA를 실행]해야 한다”고 떠들고 있다.

반면, 노무현이 한미FTA를 추진하면서 찬반이 갈린 여권의 통합은 더 어려워지고 “여권의 재집권 가능성은 1퍼센트에서 0.1퍼센트로 줄었다”(〈한겨레〉성한용 기자). ‘통합신당모임’의 독자적 신당 추진에서 보이듯 이들의 사분오열과 지리멸렬은 계속될 것이다.

이런 우려 때문에 천정배는 “한미FTA를 중심으로 정계개편이 됐으면” 한다면 서도 “한미FTA가 유일한 잣대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한편, 타결을 전후해서 정부·언론·방송 등은 그야말로 ‘응단폭격’ 식의 한미FTA 찬성 홍보를 쏟아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팽팽하던 여론이 조금 변화해 찬성이 좀더 우세해진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천정배의 말처럼 “대통령과 정부, 언론이 응단폭격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30퍼센트 가량 반대가 나온 게 신기”한 일이다.

한미FTA로 사회 양극화가 해소되기(17.5퍼센트)보다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45.8퍼센트) 생각하면서도 60퍼센트 정도의 사람들이 한미FTA를 지지했다.(〈한겨레〉여론조사)

이런 모순을 한미FTA 반대 운동이 잘 파고든다면 얼마든지 여론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국익’ 논리를 수용하는 우리 운동의 약점 때문에 이런 모순을 파고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협상 타결 직후 방송사 등의 한미FTA 토론에서 ‘국익’을 중심으로 각 산업별 이해득실을 따지는 방향으로 토론이 진행되면서 반대 진영 논자들은 수세적인 태도를 보였다.

4월 7일 한미FTA 반대 집회 - 노무현 퇴진 구호에 걸맞는 강력한 대중 투쟁이 필요하다

물론 방송사에서 토론자 배정을 불공평하게 해 찬반이 불명확한 사람이 반대 진영에 배치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반대 진영 논자들이 한미FTA가 부를 평범한 사람들의 피해를 강조했다면 더 공세적인 주장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국익’을 중심에 둔 찬반 토론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선의 협상을 했다”는 정부의 논리를 반박하기 힘들고, 산업별 득실 계산에 치중하다 보면 노동자들이 각 부문별로 분열되는 결과를 낼 수 있다.

따라서 한미FTA 반대 운동은 ‘산업별 득실 계산’이 아니라 ‘계급별 득실 계산’을 통해 한미FTA의 문제점을 들춰내야 한다. 행동이 말을 전혀 쫓아가지 못하긴 하지만 미국 노총(AFL-CIO)이 주장한 것처럼, 한미FTA는 “양국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가져다주지 못하고 … 더 많은 노동자들이 좋은 일자리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며] … 미국과 한국 다국적기업들이 대부분의 이익을 가져갈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 노동자들은 하나가 돼 한미FTA를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퇴진

한국과 미국의 기업주들이 더 많은 이윤을 거두며 부자들이 고급 승용차를 더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될 때, 평범한 노동자 대중은 광우병 위험 쇠고기와 유전자 조작 식품과 자동차 매연 가스를 더 많이 먹고 마셔야 되는 게 한미FTA이다.

민중의 삶을 파괴하는 한미FTA 타결은 무효이며 체결은 저지돼야 하고 협정 체결을 강행하는 노무현 정부는 퇴진해야 마땅하다. 이를 위해 한미FTA 반대 운동은 더 강력하고 대중적인 운동 건설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일부에서 제기하는 국민투표 실시 요구는 현 시점에서는 부적절하다. 오히려 지금은 국민투표 찬반으로

쟁점을 흐리지 말고 한미FTA 체결 반대를 분명히 하면서 무엇보다 대중 운동 건설에 매진할 때다.

국민투표 부의권은 대통령에게 있는데(헌법 제72조), 한미FTA를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노무현에게 국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도 않고, 또 노무현 퇴진을 요구하면서 그에게 국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한미FTA 협상 타결 이후 범국민은 한미FTA 반대 운동 참가자들의 분노와 정서를 반영해 ‘노무현 퇴진’을 요구했다. 참여연대까지 ‘노무현 탄핵’을 말하는 상황에서 ‘노무현 퇴진’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진지하게 추진할 운동의 과제가 돼야 한다. 민주노총의 주장처럼 “구호에 걸맞는 투쟁을 벌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그것을 가능케 할 세력 결집과 수단 건설이 필요하다. 민주노총 조직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투쟁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 한미FTA가 대중을 희생해 자본의 이윤을 확대하는 것인 만큼 이윤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이 특히 필요하다.

따라서 올해 메이데이는 한미FTA 저지와 노무현 퇴진을 위한 위력적인 투쟁의 장이 돼야 한다. 한미FTA 체결 즈음에 벌이겠다고 약속한 민주노총의 “총력 투쟁”에는 진정한 대중 파업이 꼭 포함돼야 한다.

노동자 파업과 거리의 대중적 반대 시위가 결합해 상승 효과를 낸다면 한미FTA를 저지하고 노무현을 퇴진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강동훈

한미FTA 협상 무효

범국민 촛불 집회

일시: 4월 14일(토) 오후 7시

장소: 세종문화회관 앞(변경될 수 있음)

한미FTA가 가져다줄지 모를 ‘국익’은 부유층의 이익이다

노 무현 정부는 한미FTA 협상 타결 직후 산업별 대차대조표를 들이대며 한미FTA가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농업과 의약품 등에서는 일부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었지만 자동차나 섬유 산업에서는 이익이 크므로 결국 국가 전체로는 이익이라는 식이다.

그리고 이런 ‘국익’론이 한미FTA에 대한 조건부 반대 여론(시기상조론, 졸속추진론 등) 일부를 일시적으로나마 다시 한미FTA 찬성 쪽으로 돌려놓은 듯하다.

기업 이윤의 총합이 곧 ‘국익’이라는 노무현 정부의 손익 계산법에 따르면 이번 협상은 “남는 장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한미FTA 때문에 노동자·민중이 앞으로 겪게 될 불이익과 피해는 그들의 계산에서 완전히 빠져 있다.

예컨대, 이번 협상에서 대중의 가장 큰 반감을 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만 보더라도 그렇다.

남는 장사

평범한 사람들은 값싼 광우병 위험 쇠고기를 먹을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부유층은 안전하게 값비싼 한우를 먹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학교·작업장·군대 등에서 대량 급식되는 광우병 위험 쇠고기를 피할 도리가 없다. 반면 부유층이 주로 이용하는 고급 음식점에서는 ‘쇠고기 원산지 의무 표시제’가 실시된다. 쇠고기 생산과 유통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치는 국내 쇠고기 수입·유통 업체들은 어떨까?

CJ푸드, TGI·아웃백 같은 외식업체들은 원가 절감에 뒤따를 수익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콩·옥수수·토마토 등 유전자 변형생물체(LMO)의 수입 검역 절차 완화가 더해지면 피해자와 수혜자의 차이가 더

분명해진다.

한 실험에 따르면 유전자 조작 콩을 사료로 먹은 쥐의 사산률은 56퍼센트나 났다. 두부·조미료·빵·과자·패스트푸드·음료수뿐 아니라 백신이나 약품에 들어가는 각종 원료들에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사용되면, 우리의 건강은 더 위태로워지는 반면, 국내의 대형 식품·수입·유통·제약 업체들의 이윤은 늘어날 것이다.

이처럼 노무현 정부의 ‘국익’ 논리대로라면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도 결코 밀지는 장사가 아니다. 또, 미국 축산업 자본

평범한 서민의 자녀들은 학교 급식으로 제공될 광우병 위험 쇠고기를 피하기 힘들다

가들에게도 이익이 되니 한국 지배자들과 미국 지배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야말로 ‘상생’하는 무역협정인 것이다.

의약품 가격 인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수백 개가 넘는 국내 중소 제약회사들이 경쟁에서 퇴출될 수 있지만, “의약품의 양적·질적 성장, 병원 수의 급증으로 세계 시장 증가율을 2배 이상 앞서고 있는” 한국 상황에서 상위 대형 제약사들은 오히려 더 큰 성장의 기회를 맞을 수 있다(하나금융경영연구소).

또, ‘언어넌’ 부문에서도 노동자들과 전

체 국민에게도 돌아올 이익은 없고 오히려 피해가 클 것이다. 예를 들어, 노동 부문의 협정문을 보면 “양국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법 적용을 금지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 문제 등에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상대국의 노동법에 따라 자국 노동자들의 권리와 생활조건을 하향 평준화하려 들 것이다.

계급 분단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완화 등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필수적인 부문에서의 규제 완화는 더 많은 기후 재난과 공해를 낳을 것이다. 의약품 가격 인상과 기간보험 규제 철폐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들을 무력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미FTA에 포함된 투자자-국가 제소(ISD) 조항은 무자비한 시장 논리를 거스르는 규제와 공공서비스를 모두 파괴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이렇듯 소수의 기업주·부자들에게는 기회와 부를 안겨 주고 다수의 노동자·민중에게는 커다란 불이익을 가져다 줄 한미FTA 협상은 ‘국익’의 잣대로는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한미FTA 반대 운동 진영 내 일부에서 이런 ‘국익’ 논리를 수용해 얼마나 내주고 얼마나 얻었는가 하는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운동의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미FTA 협상 초기에 반대 운동이 쌀과 스코린쿼터 등의 쟁점을 부각시키노라 의도치 않게 노동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끌어내지 못한 것이 그 예다.

한미FTA 협상 타결로 가장 크게 나누는 것은 한국의 이익과 미국의 이익, 또는 산업 부문별 이해득실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조건 악화와 기업주·부자들의 이윤 증대라는 계급 분단이다.

장호중

재앙을 부를 ‘투자자-국가 소송제’

노무현 정부에 대한 반미감정

노무현 정부는 “‘투자자-국가 소송제’ 반대는 세계화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한미FTA 협정문에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포함시켰다.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파괴력은 실로 엄청나다. 기업의 이윤 추구를 가로막는 정부 정책이 모두 소송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환경·보건·공공서비스 정책 등이 죄다 다국적기업의 표적이 된다.

1999년에 볼리비아 코차밤바에서 상하수도 운영권을 따낸 다국적기업 벅텔은 수도물 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것도 모자라 정부로 하여금 사람들이 빗물을 받는 것까지 금지하는 법을 만들게 했다! 이에 격분한 코차밤바 민중의 투쟁 때문에 볼리비아에서 쫓겨난 벅텔은 곧바로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이용해 볼리비아 정부를 상대로 2천6백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국제적 항의에 직면해 소송을 취하하긴 했지만, 이 사건은 다국적기업이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 준 전형적 사례다.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발효된 뒤, 멕시코 과달카사르 지역 주민들은 다국적기업 메탈클래드의 산업 폐기물 때문에 환경 재앙에 시달렸다. 주민들의 거듭된 항의에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매달리 설치 허가 신청을 거부하자 메탈클래드는 멕시코 정부를 제소했고, 중재심판소는 멕시코 정부에 1천6백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판결문은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본질을 명확히 보여 줬다. “본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환경 보호 조치와 같은 동기라든가 의도 등은 고려하거나 결정할 필요가 없다.

고려해야 할 문제는 오로지 투자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 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전 세계은행 부총재인 조지프 스타글리츠도 “북미자유무역협정에 숨겨져 있던 것은 새로운 종류의 권리장전(사업가들을 위한)이었으니, 이는 북미 전체에서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투자자-국가 소송제’가 한국에서

낳을 결과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예컨대,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같은 개혁 입법을 추진하거나, 광우병 쇠고기·유전자조작식품(GMO)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곧바로 다국적기업의 소송 대상이 될 것이다.

현실이 이런데도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과 조세 정책이 ‘투자자-국가 소송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호도하기 바쁘다.

그러나 진실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 정책이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정부 자신도 “어차피 다른 부동산 정책은 직접수용에 해당한다”며 그것을 인정했다.

조세 정책도 마찬가지다. “예외적인 경우에는 간접수용이 될 수 있도록 협정문에 규정”해 놓아 이마저도 ‘투

투자자-국가 소송 심판을 대부분 담당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중재위원들은 이 제도 덕분에 하루 2천 달러씩 버는데, 이 중 한 명이 김연장법률사무소의 대표 장수길이기도 하다.

요컨대, 한미FTA에 포함된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통해 한 줌도 안 되는 한국과 미국의 자본가들은 이득을 얻겠지만, 한국과 미국의 대다수 민중이 입을 피해는 실로 막대할 것이다.

조명훈

노동절 투쟁과 남북노동자 통일대회

노무현 정부에 대한 반미감정

민주노총 지도부는 올해 노동절에 경남 창원에서 북한 조선직업총동맹(이하 직맹)·한국노총과 함께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노동자 통일대회’를 열기로 했다.

국가보안법 등이 남북 노동자의 자유로운 교류와 연대를 가로막아 온 상황에서 이 기회를 이용해 노동자들은 미국의 대북 압박 철폐와 북한 주민 식량 지원 등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직맹은 남북 노동자 교류·연대의 적절한 상대가 아니다. 직맹은 북한 노동자들의 자주적 조직이 아니다. 직맹은 “로동 규율과 국가 법률의 준수 … 증산 운동을 계획적으로 수행할 것을 임무”(강령)로 하는 북한 국가기구의 일부다. 직맹은 사실상 대의체제가 없고 지도부는 로동당이 내정한다. 북한 백과사전은 직맹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무조건 철저히 옹호 관철하는 당의 적극적인 방조[협력]자”라고 설명한다.

‘생산돌격운동’, ‘초과생산운동’ 등으로 북한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쥐어짜는 데 앞장선 온 게 직맹이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진지하게 북한의 기층 노동자와 연대하려면 이런 사실을 폭폭히 알아둬야 한다.

이번 대회에 한국노총이 참가하는 것을 반대할 수는 없지만, 다음의 사실만큼은 분명히 해야겠다. 한국노총 지도부가 9·11 아합으로 노동자들의 등에 칼을 찔른 게 바로 었그제다. 9·11 아합에 항의해 한국노총 점거 농성을 한 전해투 동지들 8명이 아직 감옥에 있고, 아합의 결과로 지금 곳곳에서 비정규직 해고가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이용득 지도부는 한술 더 떠 정부와 경총에게 2천억 원을 받아 “노사분쟁 예방”을 하겠다며 ‘노사발전재단’을 만들고 있다. 배신의 한 길로 달려가는 것이다.

대정부 투쟁

물론 유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의 말처럼 “통일 사업은 입장의 차이를 넘어 함께해야 할 사안”이다. “통일 사업과 나머지 사업은 분리해서 사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나머지 사업’에서도 민주노총 지도부는 한국노총 지도부를 따라가는 듯하다는 점이다.

이석형 지도부는 “정부는 적이 아니”라며 정부와의 대화에 치중하고 있고 5대 재벌 총수와의 면담도 추진하고 있다. “파업을 자제”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한국노총 위원장 이용득은 “최근 민주노총의 행보가 우리와 부합되는 느낌을 받고 있다”며 반겼다. 이처럼 ‘통일 사업’을 연결 고리로 해서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을 따라가선 안 된다.

민족 화해와 통일도 노동운동의 과제이며 필요한 일이라는 하다. 그러나 ‘민족화해’가 ‘계급투쟁’보다 우선시되거나, ‘민족화해’를 위해 ‘계급투쟁’을 희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한미FTA라는 재앙이 노동자들의 눈앞에 닥친 지금, 이런 태도는 더욱 중요하다.

이미 이석형 위원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할 것과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한미FTA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약속했다. 따라서 ‘1987년 노동자 대투쟁’ 20주년을 맞는 올해 노동절은 한미FTA 저지와 신자유주의 퇴치를 위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의 장이 돼야 한다. 이보다 부차적 행사인 남북노동자 통일대회·축구 시합 등이 그것을 대체하거나 약화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전지윤

[편집자] 지난 호(38호)에 이어 카이로 국제 반전 회의 소식과 보고를 씁니다. 카이로회의와 이집트사회포럼의 자세한 취재기는 곧 <맞불> 웹사이트에 올릴 것이다.



헤즈볼라 정치국원 리마 파크리 인터뷰

“중동 저항세력과 국제 반전 운동은 서로 단결해야 합니다”

지난해 7월 런던에서 열린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반대 시위



2006년 여름 헤즈볼라의 승리는 중동의 저항세력과 국제 반전 운동에 매우 고무적인 소식이었습니다. 헤즈볼라 투쟁의 역사를 소개해 주시고, 최근 레바논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1982년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략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베이루트까지 점령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점령에 맞서는 저항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우리의 싸움은 아주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했고 이스라엘 무기와 맞설 수 있는 무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뒤 우리의 힘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2000년 5월에 레바논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저항세력의 힘 때문에 레바논을 자기 마음대로 공격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

과 손을 잡고 저항세력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난해 여름에 헤즈볼라를 맹렬히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 맞서 강력하게 반격했고, 그들에게 또 한 번의 교훈을 안겨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리를 계속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저항세력은 더 강해지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저항세력일 뿐 아니라 빈민들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범한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침략 후 재건 과정을 주도하고도 있는데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하는 데

큰 자부심이 있습니다. 많은 레바논인들은 가난합니다. 그러나 레바논 정부는 그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공공 서비스도 제공하지 못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마을에는 최근까지도 전기가 잘 들어오지 않았습다. 기껏해야 하루 6시간 정도였습니다. 정부는 식수도 제대로 공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헤즈볼라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많은 학교와 병원을 건설하고 [상호부조] 조합을 결성했습니다.

이번 카이로회의에서는 국제 반전 운동과 중동 저항세력 간 연대를 건설하는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저항세력과 국제적 운동이 서로 단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단결한다면 전쟁을 중단시키고 부시 정부의 호전적 의도를 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카이로 국제 반전 회의에 참가한 포베이는 이란인 여성 사회주의자이다. 그는 <여성, 노동, 이슬람: 이란의 이데올로기와 저항>(국내 미간)의 저자이다. <맞불> 기자 승주와 이예송이 포베이와 인터뷰했다.

주류 언론들은 다른 종교보다 이슬람이 더 여성을 차별 대우한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습니까?

사실, 이슬람뿐 아니라 모든 종교가 여성을 차별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이나 특히 유대교와 비교하면, 이슬람이 오히려 여성 권리를 좀더 보장합니다.

예컨대, 무슬림 여성은 재산 상속권이 있죠, 여기서도 차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재산을 적게 상속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슬람에서 여성 상속권을 보장하는 이유는 그들이 집안에서 재산에 관한 일을 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이것을 'alimony' [양육비라 부르고, 아랍어로는 '나파페'라고 합니다. 이슬람이 이것을 여성 권리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종류의 해석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이슬람이 가톨릭이나 유대교보다 덜 여성 차별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은 '테러와의 전쟁'의 중요한 명분 중 하나로 여성 해방을 말했습니다. 그들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실수로 있었지만 이슬람 국가의 여성들을 압제에서 해방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부시·블레이어·이스라엘이 페미니즘과 여성의 권리 운운하는 것은 순전한 위선입니다. 그들은 중동·북아프리카·중앙아시아·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제국주의적 확장을 정당화하려고 그런 주장을 날조한 것입니다.

일례로, 미국과 영국이 침략하고 점령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의 삶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많은 이라크 여성들은 비록 사담 후세인이 독재자였지만 점령군보다는 후세인 정부 하에서 여성의 삶이 더 나아다고 말합니다.

당시 여성은 학교를 가고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활동에 참가하고 정치 활동을 했지만, 지금은 갈등과 종파주의만 심화되어 활동 공간이 축소됐습니다. 결국 점령군은 이라크 여성의 삶을 더 악화시켰을 뿐입니다.

이란인 사회주의자 엘라헤 로스타미 포베이 인터뷰 “무슬림 여성들은 언제나 투쟁에 앞장서 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저는 아프가니스탄을 두 차례 방문하고 그곳 여성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악화

부시와 블레이어는 탈레반 정권 붕괴 이후 여성들이 학교를 갈 수 있게 됐다고 선전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학교 자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재건 사업'이 평범한 여성·남성·아동을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극소수 아프가니스탄인들은 부자가 됐습니다. 이는 그들이 미국·유럽·일본의 기업들과 결탁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대다수 아프가니스탄인들은 전기·식수·교육·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령군이 들여온 것은 포르노 영화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여성 활동가들은 포르노 영화가 확산되는 데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토와 경제에 대한 침략뿐 아니라 문화적 침략도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시 정부는 이란에 대해서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 여성의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란의 경우는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제국주의가 또다시 여성 해방을 들먹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제국주의는 민주주의와 여성 해방을 가져다 주겠다며 이란 공격 기도를 정당화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점령 하에서 여성의 삶은 악화했습니다.

이란 여성들의 처지는 무슬림이 인구의 다수인 친미 국가들, 즉 이집트·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보다 상대적으로 더 낫습니다. 예컨대 유엔 자료를 보면, 이란 여성의 94퍼센트가 읽고 쓸 줄 알고, 대학생 중 64퍼센트가 여성입니다. 여성 국회의원 수는 터키와 같고, 고위직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한국과 비슷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란에는 민주화 운동의 일부로 강력한 여성 운동이 존재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는 이란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의 한 사례로, 이란 여성 운동은 외국인과 결혼한 여성들이 자신의 시민권과 국적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을 허용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법은 이란·이집트·모로코 등에만 존재합니다. 이것은 이란의 무슬림 여성들에게 중요한 성과입니다.

이혼권

또, 이란 여성 운동은 '투석 살해' 반대 운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이것을 불법으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운동의 결과로 지난 1년 동안 단 한 건의

'투석 살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다. 그들은 이것을 불법으로 만들기 위한 활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여성 운동의 결과로 이란 여성은 이혼권이 있고, 결혼 증서에 표시된 경우 양육권도 보장받습니다. 따라서 이란 여성들은 여성권 쟁취 투쟁과 민주화 투쟁을 훌륭히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란 전쟁 위험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만약 전쟁이 발생하면 여성 운동이 지금껏 성취한 것을 모두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계속해서 서방 제국주의와 이란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투쟁

현재 미국 제국주의는 이란에 대한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부시와 블레이어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계속 거짓말을 했고, 지금 똑같은 수법을 사용해 전쟁을 이란으로 확대하려 합니다.

반전 운동이 굳건하게 단결해 이란 확전에 반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전쟁이 이란으로 확대된다면 단지 수많은 이란인들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제국주의는 핵탄두를 포함한 대규모 폭격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재앙을 낳을 것입니다. 수많은 이란인이 죽을 뿐 아니라 이란이 반격할 것입니다.

예컨대, 이란이 유전을 공격한다면 환경적·경제적 재앙이 발생할 것입니다.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지고 유럽과 남한에서도 그런 부정적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단지 이란인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인류를 위해서라도 이란 공격을 막아야 합니다.

주류 언론과 학계는 무슬림 여성들을 수동적인 희생자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카이로 회의에서 보니 많은 무슬림 여성들이 저항 운동과 민주화 투쟁 등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항 운동에서 여성은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해 왔습니다. 세계 모든 곳에서, 무슬림 세계에서도 여성들은 언제나 투쟁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방 지배자들이 부추긴] 이슬람 혐오 때문에 무슬림 여성들이 수동적이라는 편견이 퍼져 있습니다.

이집트·모로코·이란과 무슬림 국가들의 반식민주의 투쟁 역사를 보면 무슬림 여성들이 반식민주의 투쟁에 앞장섰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나라들의 민주화 운동에서도 중요한 구실을 했습니다.

투쟁

그래서 저는 먼저 "역사적으로 무슬림 여성들은 언제나 투쟁해 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쟁이나 전쟁이 있을 때마다 여성 운동은 반식민주의 민족 투쟁과 뒤섞였다가 전쟁이 끝난 뒤에야 비로소 민주적 권리뿐 아니라 여성권 쟁취 투쟁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이란 여성들이 제국주의와 전쟁에 반대해 투쟁했고, 오늘날 팔레스타인·레바논·이라크·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투쟁이 끝난 뒤에 여성들은 더 강해져 있을 것이고, 그 때에야 여성권 투쟁을 벌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크·레바논에서 여성들의 투쟁이 남성과 함께 해방을 위해 싸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 여성들은 자신의 성적 권리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세계 반전 운동이 전쟁을 중단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종식돼야 여성들이 여성권 쟁취 투쟁을 벌일 수 있는 자유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이로 회의에 참가한 무슬림 여성들은 중동 저항의 중요한 일부다

“국제 반전 운동은 전진하고 있습니다”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국제 반전 회의 때 <맞불> 기자 김용욱이 존 리즈를 만나 인터뷰했다. 존 리즈는 영국 전쟁저지연합의 주요 활동가이며 반전·반신자유주의 정당인 리스펙트의 사무총장이고, 《제국주의와 저항》(Imperialism and Resistance)(2005)의 저자이다. 그는 올 7월에 ‘다함께’가 주최하는 ‘전쟁과 혁명의 시대’ 포럼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국제 반전 운동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국제 반전 운동이 매우 영향력 있는 운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극적인 성공을 바라지만 말입니다. 우리

가 붉은 깃발을 들고 전진하면 적들이 무서워서 도망치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 식이 아니면 운동이 전진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운동은 다릅니다. 좀더 복잡합니다. 분명 유럽의 반전 운동은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2003년 ‘의지의 동맹’의 주요 축이었던 스페인의 호세 아스나르 정부와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정부는 이라크 전쟁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토니 블레어는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일찍 총리직 사임을 약속해야 했습니다. 이는 2006년 여름 이라크 전쟁과 블레어의 레바논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 때문이었습니다. 조지 부시도 지난해 중

간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따라서 바로 이런 현실 때문에 스페인과 이탈리아 군대가 철군했고, 영국군 일부도 철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운동이 논쟁에서 이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설사 우리가 원한만큼 빠리는 아니더라도 우리 운동은 전진하고 있고 우리 적들은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운동이 자동으로 계속 전진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란으로 전쟁이 확대된다면, 저들은 그것을 이용해

2월 24일 10만 명이 참가한 영국 런던 반전 시위

국제 반전 운동에게서 주도권을 빼앗으려 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가 이룩한 전진을 유지할 뿐 아니라 반전 운동의 저변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계급을 조직해야 합니다. 특히 조직 노동계급과 함께 행동하고 그들이 반전 투쟁에 더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이 국제 반전 운동의 급진성과 자신감에 고무를 받아 노동조합 투쟁을 강화하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노동계급은

부시와 그 동맹들에 맞선 이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세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제국주의와 저항》이라는 책에서 신제국주의 시대에 주요 제국주의 열강 사이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하셨는데요, 고전적 제국주의 시대처럼 주요 제국주의 열강끼리 다시 충돌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그런 갈등이 심화하고 있고, 이라크 전쟁을 둘러싸고 프랑스·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와 미국·영국 사이에 갈등이 표출됐습니다. 미국 진영과 러시아·중국 사이에서는 이런 갈등이 좀더 노골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냉전 이후 전쟁의 양상을 보면, 충돌은 대부분 주요 제국주의 열강과 약소 열강 사이에서 발생했습니다.

만약 부시 정부가 이란으로 전쟁을 확대하면 중동 전체가 여기에 휘말릴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주요 제국주의 열강들은 그런 전반적 충돌 속에서 서로 다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큼니다. 중동에 걸린 이익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따라서 주요 제국주의 열강 사이의 갈등이 아직 본격화하지는 않았지만, 주요 열강과 약소 열강 사이의 충돌이 주요 제국주의 열강들 사이의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라크 점령 종식을 외치며 1백만 명이 행진하다

바그다드가 함락된 지 4년이 되는 날인 4월 9일 거의 1백만 명의 이라크인들이 미군 점령의 종식을 요구하며 나자프 시(市)의 거리를 가득 메웠다.

시위대들은 이라크 국기를 두른 차량과 버스들을 타고 도착했고, 시아파와 수니파 무슬림 사이에 종파적 폭력이 벌어졌던 지역들인 라티피아나 마흐무디아를 포함해 이라크 전역에서 왔다.

한편, 수도인 바그다드에서는 미군이 내린 24시간 통행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수천 개의 이라크 국기가 주택과 상점들 밖에 내걸렸다.

시아파 반미 성직자 무크타다 알 사드르가 나자프 행진 참가를 호소했다. 사드르의 마흐디군은 2003년 이래 점령에 맞서 두 차례 봉기했다.

이번 시위 직전 사드르 지지자들은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1백30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주요 시아파 도시인 디와니아의 통제권을 놓고 미군과 이라크 정부군에 맞서 전투를 벌였다.

시위에서 낭독된 사드르의 성명은 “근심과 억압, 점령의 폭정으로 점철된 48개월이 흘렀다. 지난 4년은 우리에게 더 많은

죽음, 파괴, 수모만을 안겨줬다”고 말했다.

사드르는 조지 부시가 미군 3만 명의 “증파”를 시작한 뒤 이란으로 도피했다고 알려져 왔다.

미군은 이 성직자를 “이라크 안정의 최대 위협”으로 묘사한다. 미군은 사드르 지지자들을 소탕하기 위해 바그다드의 시아파 빈민 지구에 요새들을 설치했다.

이번 시위의 규모는 사드르의 조직이 분열



4월 9일 이라크에서 열린 점령 반대 시위

하고 있고 그가 힘을 잃었다는 미국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반미 성직자가 여전히 커다란 대중적 지지를 얻고 있음을 보여 준다.

사드르 지지자들 — 사드르는 이들을 민병대가 아니라 “민중의 군대”라고 부른다 — 은 분열을 겪어 왔다.

마흐디군의 일부 분파들은 수니파 무슬림들에 대한 종파적 살해에 가담했다. 이것은 흔히 시아파 지역의 차량 폭탄 공격에 대한 대응이었다. 반면, 다른 일부는 수니파와 단결을 유지하려 애썼다.

4월 8일 사드르는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다른 이라크인들을 공격하지 말고 점령군을 내쫓는 데 온 힘을 쏟으라고 호소하는 또 다른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적 단결

행진에 참가한 수니파 무슬림 대표단은 이라크 저항 세력들의 단결을 위한 노력을 상징했다. 이 날 수니파 성직자들은 시위대 맨 앞에서 행진했다.

시위 전 날 영향력 있는 수니파 단체인 ‘무슬림학자연합’의 셰이크 하리스 알 다리 대표는 이라크에서 “반목”을 조장하고

있는 점령군을 비난했다.

4월 6일 수니파 지역에 근거지를 둔 가장 영향력 있는 전국적 저항 조직들 가운데 하나는 종파적·종족적 반목을 조장하며 저항 운동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수니파 단체들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많은 이라크인들이 국민적 단결을 지지하는 뜻으로 이라크 지도 모양의 금색 장식을 몸에 걸기 시작했다. 나자프 시위 참가자들은 시아파 무슬림을 상징하는 노란 색과 검은 색의 깃발 대신 이라크 국기를 흔들었다.

4월 9일 시위는 점령 초기의 대규모 [시아파·수니파] 연합 시위들 이후 이라크에서 벌어진 가장 큰 시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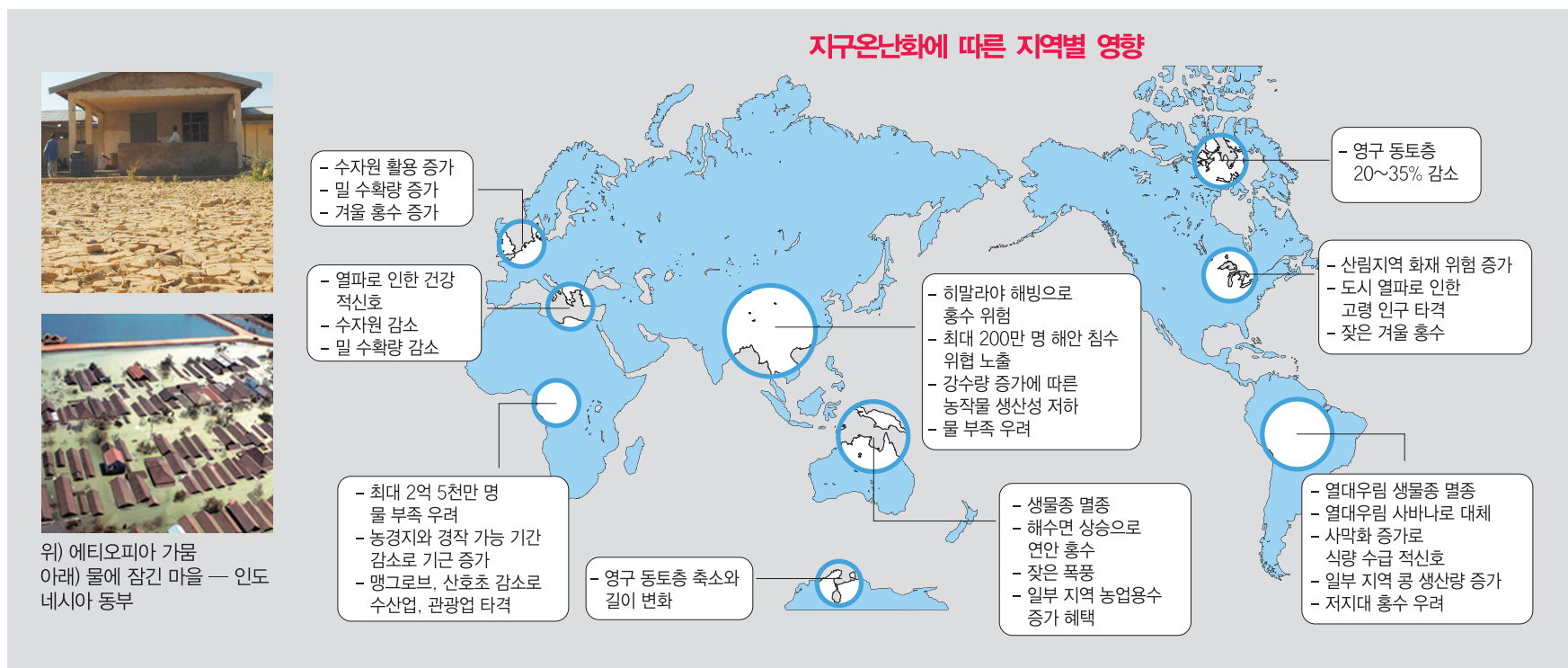
군복을 입은 이라크 병사들도 시위 군중에 가세했다. 사드르는 그들에게 “여러분의 주적인 점령 세력과 협력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사드르 조직의 고위 간부인 살레 알 오바이디는 이 날 시위를 “해방을 위한 외침”으로 묘사했다.

“우리는 내년에 다시 바그다드 함락일이 돌아올 때면 이라크가 완전한 주권을 지닌 해방 독립국이 돼 있길 바란다.”

사이먼 아사프

※ 이 글은 영국의 혁명적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크>(4월 14일차)에 실린 글을 번역·축약한 것이다. 번역 전문은 <맞불> 홈페이지에 올린다.



기후 변화의 최대 피해자는 가난한 사람들이다

김종환(연세대 대기과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지난 4월 6일 유엔 ‘기후변화 정부간 위원회(IPCC)’는 기후변화가 사회와 환경에 미칠 파급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IPCC는 지난 2월 4일에도 지구온난화의 과학적 근거와 예상되는 온난화 정도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는 이러한 예측이 현실화할 경우 입게 될 사회적 손실과 환경 피해를 다루고 있다.

지구온난화는 석유·석탄 같은 화석연료 사용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가 많아져서 일어난다. 이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미국·중국·러시아와 세계 1위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번 보고서에서 피해 규모를 낮추려고 막판까지 이의를 제기했고, 과학자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부 표현은 실제로 수정됐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막판 물타기에도 불구하고 보고서가 예측하는 지구온난화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지구 기온이 1.5도~2.5도만 상승해도 동식물의 20~30퍼센트가 멸종 위기에 처하며, 바다가 지금보다 산성을 띠게 돼 산호처럼 껍질이 있는 동식물과 이들에 의존하는 해양 생태계가 영향을 받게 된다. IPCC는 지난 2월 보고서에서 2100년까지 평균 온도가 최고 6.4도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물 부족

2020년에서 2080년까지 해안가에 사는 수백만 명이 해마다 홍수 피해를 입을 텐데, 특히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삼각주에서 피해가 클 것이다.

2020년까지 아프리카에서만 현재의 열악한 물 수요를 기준으로 최대 2억 5천만 명이 물부족 위험에 노출되며, 21세기 말엽에 이르면 많은 인구가 밀집된 해

안 지역은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최소한 GDP의 5~10퍼센트를 지출해야 할 것이다.

중앙·남부·동남 아시아와 동아시아에서도 강에서 얻을 수 있는 담수가 줄어들어 2050년까지 10억 명 이상이 물 부족에 시달리게 된다. 특히 남부·동남 아시아와 동아시아에서는 홍수와 가뭄에 의한 콜레라와 같은 풍토병 발생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은 빙하가 줄어들고 더 강한 태풍과 해수면 상승으로 생태계의 큰 혼란이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 2080년까지 동식물의 60퍼센트가 멸종하는 지역이 생길 것이다.

라틴아메리카는 21세기 중엽이 되면 토양의 수분이 줄어들어 지금의 아마존 열대우림이 나무가 없는 대초원으로 바뀔 것이다. 열대우림에 서식하는 수많은 동식물이 멸종해 생물 다양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북아메리카에서는 21세기에 폭염의 강도와 지속 기간이 길어져 피해자가 늘어날 것이다. 인구와 주요 시설이 밀집된 해안 지역에서는 카트리나처럼 강한 태

풍이 닥쳐 피해 규모가 클 것이다.

21세기가 지나면 상황은 더욱 나빠지는데, 그린란드와 남극의 빙하와 얼음이 상당 부분 녹아 해수면이 4~6미터 정도 상승할 확률이 50퍼센트 이상이다.

국내에서는 기상청이 IPCC 보고서를 토대로 기후변화의 피해를 예측한 결과, 2100년까지 기온이 4도 상승하고 산맥 지대를 제외하고 서울을 포함한 서해안·동해안 중부까지 아열대 기후로 바뀌게 된다.

환경부는 벼 수확량이 15퍼센트 감소하고, 기존의 산림 생물은 모두 고사하거나 고립돼 멸종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말라리아 같은 아열대성 전염병이 창궐할 위험도 경고했다.

양극화

IPCC 보고서는 가난한 나라와 가난한 계층일수록 피해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가난할수록 피해 방지 기술을 이용하기 어렵고, 기후에 맞게 산업과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력이 적으며, 식량과 물 확보에서 자연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기 때문이다. 아프리카는 다양한 외적 조

건과 낮은 적응력 때문에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대륙으로 분류됐다.

사회의 양극화 때문에 한 대륙이나 나라 안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집중될 것이다. 단적인 예로 인도네시아에 가뭄이 닥치자 평범한 현지 주민들이 사용하던 우물은 바닥이 났지만, 돈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골프장들은 하루에 1천 톤의 물을 사용했다. 이러한 추세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물이 귀해질수록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이러한 예측을 반영하듯,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태도에 따라 그 피해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양한 사회 조건에 따라 시나리오를 달리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전 지구적으로 풍요와 빈곤이 양극화해 있고 기후변화 방지 노력이 지역적으로 파편화해 있는 시나리오(A2)일 때 피해가 가장 크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구온난화 피해를 줄이려면 전 지역의 사회·경제적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절실하다.

이에 반해 최근 한국 정부가 협상 타결한 한미FTA는 이러한 환경의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다. 미국과 나프타(북미 자유무역협정) 체제로 수출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멕시코의 마킬라도라에서는 유해 물질로 하천이 오염돼 깨끗한 물이 워낙 귀한 탓에 아이들에게도 물 대신 콜라를 먹일 정도다!

수질 오염을 막으려고 멕시코 정부가 미국 기업에 폐기물 시설 건설 허가를 내주지 않자, 그 기업은 나프타에 보장된 “투자자 정부 제소권”을 이용해 멕시코 정부한테서 1백65억 원의 피해 보상을 받아서 떠났다.

부의 양극화를 심화해 결과적으로 환경 피해의 양극화를 가져오고 무차별 경쟁으로 통합적인 환경 개선 노력을 좌절시킬 국가와 기업들의 시도에 맞선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다함께의 기본 입장

노동계급의 자기해방

자본주의는 착취, 억압, 빈곤, 환경파괴, 전쟁 등을 낳는다.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의 부를 만드는데도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부를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이윤이 아닌 인간의 필요에 따라 부의 생산과 분배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사회를 위해 싸운다.

오직 노동자들 자신의 대중 투쟁으로써만 자본주의 착취·억압 체제를 없애고 그러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점진적 개혁들은 착취와 억압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기관들은 종립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억압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노동계급에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국제주의

노동자들은 국제적인 계급이고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은 국제적인 투쟁이다.

우리는 노동자들 사이의 민족적 분리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노동계급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지지한다.

우리는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맞서게 만드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북한 난민과 이주노동자의 이주 규제에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세계 지배와 그들의 전쟁에 반대하고, 제국주의 지배에 맞서는 피억압 민족의 민족해방 운동을 지지한다.

근본적 사회변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고립돼서는 안 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옛 소련과 동유럽처럼 북한과 중국과 쿠바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 나라들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비민주적 사회이다.

우리는 그 곳 노동자들이 지배 관료에 맞서 벌이는 투쟁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민족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국제 변혁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자본주의 하에서는 여성 차별, 인종 차별, 동성애자 차별 등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억압을 당하는 사회집단들이 있다. 이러한 억압들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자 연대를 약화시키는 데 이용된다.

모든 형태의 억압에 반대해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은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편, 근본적 사회변혁 없이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여성,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그밖에 영세노점상과 철거민과 빈민 등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한다.

현장조합원 운동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의 역할은 자본주의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장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노조 지도자들이 싸울 때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로부터 독립한 현장조합원 대중 행동을 건설한다.

변혁 정치조직

노동자들이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려면,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들이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지지자들은 노동자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대중조직 속에서 활동함으로써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수 있다.

우리는 개량주의 지도자와 개량주의 사상이 피억압 대중의 이익에 어긋남을 실천에서 입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인권 억압에 맞선 청소년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지난 4월 1일 교복 치마 단이 짧은 이유로 교사에게 단을 뜯긴 학생이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체벌 금지법이 논의되고 학생 인권에 관한 교육부 공문이 내려오기도 한다지만, 이 사건은 여전히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학교들 대부분이 새 학기를 맞아 용의 복장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서울 단대부고에서는 한 학급 전체 34명 중 29명이 강제 이발당하는 일이 있었고, 지난달 서울 신목중학교에서는 강제 이발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학생을 경찰이 도리어 학교 학생부로 넘기는 일도 있었다. 심지어 머리를 묶는 방울의 지름을 규제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단추가 떨어졌다고 벌점을 받는 일도 있다.

휴대폰도 대대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휴대폰을 압수한 뒤 이동통신사 해지서를 받아와야 돌려주거나 졸업할 때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학교 측은 수업에 방해된다고 하지

3월 12일 중앙고 학생들이 벌인 시위

만 그건 서로 약속으로 해결할 일이지 소지품을 압수하는 식의 인권 침해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또 일부 학교에서 활영기기를 모두 금지하는 것을 보면, 최근 인권 침해를 푼카로 고발하는 일이 잦아지자 휴대폰 규제 강화로 이를 통제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학생들의 항의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중앙고에서는 점심시간에 30여 명이 모여 '두발 자유', '학생 인권 보장'이라고 쓴 카드를 들고 구호

를 외쳤고 이에 호응한 많은 학생들이 창문에서 함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서울 노원고에서도 학생들이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시위를 벌였다.

평촌고에서는 한 학생이 청소년인권토론회 전단지를 학내에서 돌리며 홍보했고, 이에 학교는 징계하려고 했으나 학생과 연대단체들의 항의로 징계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4월 14일에는 진보적 청소년, 교육단체들이 공동 주최하는 거리 집회가 열린다. 숨막히는 인권 억압, 이를 외면·조장하는 교육부, '3불 정책' 폐지 운운하며 학생들을 살인적인 입시 경쟁으로 몰아 가려는 자들에 맞서 우리의 인권을 되찾으려는 힘찬 외침이 필요하다.

박조은미

청소년 인권을 위한 집회
‘미친 학교를 혁명하라’
2007년 4월 14일(토) 오후2시
광화문 KT빌딩 앞

‘국익론’의 한계가 드러난 ‘100분 토론’

4월 5일 MBC ‘100분 토론’에서 한미FTA에 반대하는 패널들이 김종훈에게 장시간 ‘과외’를 받는 분위기가 연출됐다. 물론 김종훈이 협상 수석대표로서 광범한 정보를 가진 반면, 많은 정보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탓에 반대측 패널들은 제한된 정보를 가질 수밖에 없었으니 어느 정도는 이런 분위기를 피할 수 없었던 듯도 하다.

그러나 반대측 패널들이 한미FTA 협상을 ‘국익’의 관점으로 접근하다 보니 타결 내용을 평가하는 방향도 국익을 얼마나 잘 관철했는지로 이어져 찬성측 패널들에게 수세적으로 몰리게 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반대측 패널들이 토론회에서 폭로하고 주장해야 할 부분들은 거의 진행되지 못했다. 국가의 이익 운운하지만 그 이익이 진정 누구의 이익인지를 밝히는 데 반대측 패

널들은 너무나 무기력했다.

반대측 패널들이 토론회에서 주되게 다뤄야 했던 것은 노동자·민중의 삶에 관한 것들이어야 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당장 미국산 광우병 위험 최고기가 우리의 밥상에 올라올 것이며,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LMO(유전자조작생물체)가 우리의 식품안전을 위협할 것이다. 교육·의료·물·전기·가스·철도 등 공공서비스가 시장에 내맡겨져 우리의 삶은 더욱 팍팍해질 것이다. 환경 파괴가 가속화하고, 한미FTA를 빌미로 한 구조조정(대량해고)과 비정규직 확대도 볼 보듯 뻔하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한미FTA의 반노동자·민중성을 날카롭게 폭로해 나가며 더욱 광범하고 강력한 투쟁을 건설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태현

통계 수치 출처가 없어 아쉬웠다

〈맞불〉38호를 보고 1면의 “국민의 83퍼센트가 반대한 한미FTA는 무효다,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기사가 다소 꼼꼼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싶다.

기사의 내용은 좋았다. 그러나 국민의 83퍼센트가 반대했다는 근거가 기사 내용에 전혀 언급돼 있지 않아 신문을 보는 독자들은 궁금함을 넘어 어리둥절하기까지 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캠페인을 할 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 왔다. 그때 내가 정확히 답변하지 못한 게 못내 아쉽다.

따라서 통계자료나 수치는 인용 출처를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보완된다면 더 멋지고 알찬 〈맞불〉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조민호

포럼

서울 중부

미국은 왜 이란을 공격하려 하는가?

4월 19일(목) 오후 7시30분

연사: 유달승(한국외대 이란어과 교수)

장소: 향린교회

문의: 019-647-3309

한국외대

등록금 1천만 원 시대 — 신자유주의와

대학 교육

4월 19일 (목) 6시30분

연사: 서범진 (이건희 박사학위 수여 저지 시위 참가자, 고려대 출교자)

장소: 인문과학관 210호

문의: 010-4670-1392

강원대

한미FTA 타결 — 도약의 발판인가, 재앙의 시작인가?

4월 18일 (수) 7시

연사: 강동훈 (주간 〈맞불〉 기자)

문의: 010-4607-5964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이란 공격에 반대하십니까? ☐
- 비정규직화와 한미FTA에 반대하십니까? ☐
-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
- 성, 성 지향, 인종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십니까? ☐
- 토론하고 논쟁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활동가들의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표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전쟁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해 함께 투쟁합니다.

다함께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 백은진



정기구독하십시오

☐ 6개월 / 2만5천 원
(신문값 20,000원 + 우송료 5,000원)

☐ 1년 / 5만 원

(신문값 40,000원 + 우송료 10,000원)

신문 중원으로 정기구독 요금이 다소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정기구독자는 구독 기간 만료일까지 인상된 요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reader@counterfire.or.kr 전화: 02-2271-2395

계좌번호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백은진

‘범여권 개혁 세력’은 진보가 아니다

민주노동당이 중앙위원회에서 진보진영 선거연합을 추진하기로 공식 결정한 뒤 진보진영 단결의 범위가 논쟁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4월 6일 ‘창조한국 미래구상’(이하 미래구상) 주최 토론회에서도 선거연합의 기준과 범위가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미래구상’ 공동 집행위원장 정대화 교수는 선거연합의 범위를 열우당·민주당·열우당 탈당파 등 “범여권 개혁 세력”으로 넓혔다.

정대화 교수는 ‘반수구·반양극화 연대’를 제안했다. “반수구 전선과 반신자유주의 전선 어느 것 하나만으로는 대선에서 승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반수구는 개혁 세력의 과제이고 반신자유주의는 진보 진영의 과제”인데 이들이 서로 연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대화 교수는 ‘개혁 세력’과의 연합을 핵심 전제로 여긴다. “진보진영 혼자서는 대선 승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의 구상은 범여권의 정계 개편과 통합 논의와도 맞물려 있는 듯하다. ‘시민운동 영역에서 개혁 세력이 결집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미래구상’이 ‘개혁 세력’의 위기가 낳은 공백을 진취적으로 메워, 개혁을 염원하는 대중에게 정치적 선택지를 주겠다는 취지는 훌륭하다.

진정성

그러나 주된 고민이 ‘개혁 세력’ 재결집에 있다 보니 정작 중요한 진보진영 단결 문제는 상대적으로 주변화된다.

또, 정대화 교수는 “개혁 세력의 재편”이 “진보개혁진영의 대선 승리를 위한 출발점이자 필수적 조건”이며, 그런 연후에야 “진보정치세력과의 선거연합과 연립정부를 다음 과제로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이 때문에 진보진영의 독립적 구실과 위상은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신의 구상이 반한나라당 전선론 또는 비판적 지지론의 재탕이 아니라는 정대화 교수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난해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 운동을 잔혹하게 탄압한 ‘개혁’ 정부
- 당시 총리 한명숙·법무장관 천정배 등 ‘개혁 세력’ 대다수는 탄압을 지지·묵인했다

결국 정대화 교수가 제시한 연합의 기준과 범위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

먼저, 진정한 개혁을 염원했던 대중에게는 열우당·민주당의 사이비 개혁 세력이 야말로 환멸의 대상인 배신자들이다. 이들을 포함해서는 반수구 전선 강화는커녕 그 진정성마저도 의심받을 것이다.

둘째, ‘범여권 개혁 세력’을 포함한 ‘반수구 전선’은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약화시킬 것이다. 정대화 교수는 문국현·정운찬·한명숙 등을 거론하며 “이들을 빼놓은 [진보개혁진영 후보 단일화] 경선은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이들은 하나같이 한미FTA 찬성론자들이다. 게다가 이날 ‘민생정치모임’·민주당·열우당을 대표해 나온 의원들(유선호·이낙연·이목희)은 비정규직 악법을 강행하거나 찬성했던 자들이다.

정대화 교수는 반신자유주의 전선이 “국가경영 담론으로는 한계”가 있고 “대중적 설득력이 부족해” “연대를 협소화”한다며,

대신 ‘반양극화 전선’을 제시했다. 그러나 양극화 해소는 노무현조차 말할 정도로 모호한 구호다. 이 모호함을 틈타 ‘개혁 사기꾼’들이 들어올 여지를 줘서는 안 된다.

학살 동맹

셋째, 햇볕정책과 남북교류를 근거로 열우당 등의 ‘개혁 세력’들을 ‘평화 세력’이라고 보는 것도 잘못이다. 이들은 이라크 파병을 주도한 학살 동맹 가담자들인 데다 한반도 평화에 일관된 것도 아니다. 이들은 대부분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해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대 운동 탄압에 일조했다.

비록 천정배와 김근태가 개혁 염원 대중의 환심을 사려고 한미FTA 반대 뒷북을 쳤지만, 비정규직 악법과 이라크 파병에 찬성했다는 점에서 이들은 함량 미달이다. 따라서 ‘범여권 개혁 세력’까지 선거연합

에 포함하지는 제안은 전체 진보진영의 단결이 아니라 분열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이 제안은 대다수 민주노동당 당원들과 민주노동당 밖 좌파 노동단체들, 일부 NGO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요구다.

계급 연합

또, 신자유주의와 제국주의 전쟁에 맞서는 저항을 마비시키고 진보진영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우파인 베를루스코니의 복귀 가능성을 우려해 최근 ‘사회적 자유주의자’ 프로디와 연합했던 이탈리아 재건공산당이 그 반면교사다. 이 때문에 재건공산당은 프로디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지 못했고, 그 결과 이탈리아 주류 정치는 더한층 우경화했다.

이 점에서, 민주노동당 최규엽 집권전략위원장이 토론회에서 노무현과 열우당의 개혁 배신을 신랄하게 폭로하면서도 정작 사건임을 전제로 “개혁 세력과 연합을 열어둘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우려스럽다.

민주노동총 이영희 정치위원장은 <참세상>과의 인터뷰에서 “‘다함께’가 내놓은 세부안 중 3번이 ‘한나라당과 열우당과 그 변종 등 주류 정치 세력의 일부여서는 안 됨’이었는데, 어찌 보면 진보진영 대단결 하자면서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태도는 진보진영 선거연합이 ‘계급 연합으로 갈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에 빌미를 줘 진보진영 단결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래서는 ‘개혁 사기꾼’들의 위기가 낳은 정치적 기회를 이용하지는 진보진영 선거연합의 취지만 왜곡될 뿐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의 선거연합 기준은 열우당과 그 변종 등 사이비 개혁 세력과 분명하게 선을 긋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그래야만 단결의 성과가 사이비 개혁 세력이 아닌 민주노동당과 전체 진보진영 강화·발전에 돌아갈 수 있을뿐더러, 대선에서 진정한 개혁을 바라는 대중의 지지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규한

GM대우 비정규직 투쟁의 소중한 승리

4월 2일 GM대우 부평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 3개월여 만에 고용보장과 해고자 복직을 따내며 값진 승리를 거뒀다. 하청업체인 스피드 파워월드에서 폭행·해고당했던 노동자가 복직됐고, 체불임금 지급과 고소고발·가압류 철회도 쟁취했다.

이 승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과 정규직 활동가들의 연대에 힘입은 것이다.

지난 1월 22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외주화 반대 투쟁을 하던 한 노동자가 구타당하고 해고되자 2주 동안 잔업을 거부했고, 생산라인을 전면 중단했다.

대우차 정규직 노조 지도부의 소극적 태도와 달리 일부 정규직 투사들도 리플릿 배포와 스티커 부착 등 연대에 적극적이었다.

이런 연대는 시간이 갈수록 여러 현장조직들로 확산됐다.

전환점

3월 22일 비정규직 활동가들과 금속노조 비정규특위가 공장 앞에서 연 ‘GM대우 부평공장 폭력 규탄 및 해고자 복직 결의대회’가 전환점이 됐다. 2백여 명이 참가한 이 집회에는 기륭전자, 현대차 아산·전주공장 비정규직, 기아차 비정규직,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등이 참가했다. 대우자판, 도시철도,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등도 힘을 보탰다.

3월 29일 연대 투쟁에 고무된 비정규직·정규직 활동가들이 처음으로 공장 안

산되자 사측은 결국 양보했다.

권순만 GM대우 창원공장 비정규지회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외부연대를 만들고, 공장 안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를 이끌어 내서 승리했다는 데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악법 통과로 곳곳에서 비정규직 해고가 벌어지는 지금, GM대우 부평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정규직 활동가들이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보여 준 것이다.

권순만 지회장은 “외주화 시도가 비정규직의 심각한 고용불안을 야기하는데, 이는 정규직 구조조정의 수순이기도 하다”며 “비정규직만 싸워서 될 일이 아니고, 정규직이 함께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종남

3월 29일 열린 GM대우 부평 공장 안 집회

에서 집회를 열었다. 해고와 불이익이 두려워 이제껏 숨죽이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참여가 늘고, 정규직 활동가들의 연대가 확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악을 저지하라

한미FTA를 타결한 노무현 정부가 이제 국민연금 개악까지 강행하려 한다. 이번에도 조중동은 노무현의 개악을 열렬히 지지하고 있다.

기성 정치권의 분열 때문에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개악안과 한나라당의 수정안이 모두 부결됐다. 그러나 노무현은 포기하지 않고 곧바로 다시 개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유시민의 복지부장관 사퇴 소동은 연금 개악을 강행하겠다는 신호다. 노무현은 유시민의 진퇴와 연동시켜 더욱 강력히 개악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정부의 개악안이 통과되면 국민연금 급여율은 자기 평균소득의 6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줄고, 보험료는 9퍼센트에서 2018년까지 12.9퍼센트까지 오르게 된다.

앞으로 연금 평균 가입 기간을 21.7년으로 추정할 경우, 실질 급여율은 30퍼센트 남짓이다. 이 기간동안 노동자 평균임금인 월 소득 2백40만 원 기준으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매달 21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60만 원 조금 더 받는다.

정부 개악안이 통과되면 매달 30만 원 정도를 내고도, 50만 원 수준의 연금밖에 못 받는다. 여기에 기초노령연금 9만 원을 더해도 지금보다 손해다. 국민연금의 월 소득 상한선이 3백60만 원이어서 월 소득 2백40만 원인 사람도 높은 수준인데도 이 정도밖에 받지 못하니, 국민연금 가입자 대다수가 최저생계비 이하를 받는 것이다.

명백한 복지 삭감이며 개악이다.

노무현 정부는 개악을 강행하려고 역겨운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 2047년에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돼 후세대에게 부담이

된다는 협박을 주술처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사회 전체의 노령 인구 부담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다음 세대는 국민연금을 더 내든 개별적으로 부모님을 부양하든 더 많아진 노인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 더 많은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후세대 부담” 운운하는 것은 완전한 기만이다.

진정한 문제는 늘어나는 노령 인구를 부양하는 사회적 비용을 과연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이다.

복지 삭감

노무현 정부의 ‘더 내는’ 개악은 이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는 시도다. ‘덜 받는’ 개악은 공적 연금을 축소해 노령 인구 부양 비용을 개인 부담으로 떠넘기려는 시도다.

국민연금은 노후 빈곤을 예방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연기금을 계속 운용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정부와 사장들은 노후 빈곤 예방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그들의 진정한 관심사는 ‘주인 없는 돈’ (연기금)을 끌어다 부족한 투자 재원을 메우고 운용하는 것이다.

게다가 국민연금 제도는 애당초 일정 시점이 되면 쌓아놓은 연기금이 고갈되도록 설계돼 있다. 연기금이 고갈되면 그 때부터는 그 해 걷은 돈으로 그 해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와 마찬가지로 평범한 사람들의 노후 보장에는 관심이 없는 한나라당이 정부 개악안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개악의 내용에서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2005년에 기초연금제를 내놓은 이유는 국민연금을 소득비례연금과 기초연금으로 나누고 소득비례 연금을 축소하기 위해서였다.

소득비례연금이 줄면 국민연금의 낮은 급여액수에 불만인 사람들이 ING나 삼성생명 등 사적 연금을 찾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가난한 노인들은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된다.

또, 한나라당이 연금 보험료 인상에 반대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내는 보험료의 절반을 내게 돼 있는 기업주들의 압력 때문이다. 기업주들이 ‘더 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개악안과 한나라당 개악안의 차이는 ‘똥과 오줌’의 차이 정도다.

4월 2일 개악 시도 실패 이후, 민주당이 중재안을 내면서 정부와 한나라당의 타협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중재안은 급여율을 40퍼센트로 낮춰 ‘그대로 내고 훨씬 덜 받는’ 내용이며, 지난번 유시민 안처럼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분리시키는 것이다.

유시민은 “국민연금법 개정이 굉장히 입에 쓰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법이라는) 일종의 사탕을 상에 같이 놓은 것”이라고 했는데, ‘사탕’마저 상에서 내리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지난 4월 2일 정부의 개악안에 반대한 것은 옳았지만 한나라당과 ‘공조’한 것은 잘못이었다. 이

것은 2004년 총선 전부터 민주노동당이 주장해 온 국민연금 삭감 없는 기초연금제 도입 주장에서 후퇴한 것이다.

그 점에서, 오건호 정책전문위원처럼 이것을 “성과”라고 평가하는 것은 한참 틀렸다. 지금의 ‘개악 정국’에서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연금 강화를 통한 소득재분배 강화 등 좌파적 대안은 실종된 상태다.

한미FTA 저지 투쟁에 앞장서고 있는 민주노동당이 한미FTA 골수 지지자인 한나라당과 ‘공조’하는 것은 지지자들을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

공조

오건호 의원은 “진보 운동이 ... 국가 재정 확대의 비전을 보여 주어야 한다”며 후퇴를 정당화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재정 고갈론’에 주눅들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지 향상을 위한 아낌없는 지출을 주장해야 한다. 한국은 연금에 대한 정부 지출이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민주노동당은 복지 재정 확보를 위해 기업주와 부자들이 지금보다 세금과 보험료를 몇 배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얼마 전 재산공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약 90퍼센트의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재산이 몇 억 원씩 늘었다. 현대차 회장 정몽구의 지난해 주식 배당금은 무려 2백76억 원이었다.

‘지속가능한 공적 연금’은 강력한 소득 재분배 정책 여부에 달려 있고, 그것은 급진적 의제제시와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대중 투쟁 건설을 통해 가능하다.

〈맞불〉 증면을 위한 5천만 원 모금에 동참합시다

* 02) 2271-2395으로 메시지나 전화를 주십시오.

* 통장으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백은진)

국민은행 017002-04-078931 기업은행 066-042771-01-012 농협 100037-56-119794 신한은행 308-12-498840 우리은행 1002-130-549338 우체국 011726-02-129945 하나은행 197-910005-87207

* 홈페이지 www.counterfire.or.kr에서 핸드폰 결제로 모금에 참여하거나 CMS 계좌이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CMS 모금은 매월 25일에 인출됩니다.)

